

EDCF 부정당업자 제재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지원사업의 컨설턴트 고용계약, 구매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입찰참여자가 제출하는 '경협기금 지원사업 참여관련 확약서' 및 기금지원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이 개도국 정부와 체결하는 계약 등에 근거하여 은행이 부정당업자에 대해 제재를 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① “부정당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의미한다.
 1. 기금지원사업의 계약과 관련하여 이 기준 붙임 각 호가 정하는 부패 또는 부정행위에 관여했다고 인정되는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 중에 있는 자
 3. 다자개발은행으로부터 상호제재(cross debarment) 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 중에 있는 자
- ② “수주자 등”이라 함은 컨설턴트 고용계약, 구매계약의 수주자 또는 동 계약을 수주하려고 하는 자를 의미한다.
- ③ “계약자”라 함은 컨설턴트 고용계약 또는 구매계약을 체결한 자를 의미한다.
- ④ “EDCF 제재기간”이라 함은 은행이 붙임 「제재사유 및 제재기간」에 따라 부정당업자가 기금지원사업의 계약 입찰에 참가하거나 계약을 수주 또는 체결하지 못하도록 한 제재의 대상 기간을 의미한다.

제3조(제재 내용)

- ① 수주자 등이 부정당행위에 관여한 것이 제4조(제재사유의 확인)에 의해 인정된 경우에는 해당 부정당업자는 당해 계약을 수주하거나 체결하지 못한다.
- ② 수주자 등 또는 계약자가 부정당행위에 관여한 것이 제4조(제재사유의 확인)에 의해 인정된 경우에는 해당 부정당업자는 EDCF 제재기간 동안 기금지원사업의 계약 입찰에 참가하거나 계약을 수주 또는 체결하지 못한다.
- ③ 부정당업자로서 제재를 받은 자는 EDCF 제재기간 종료 후에도 부정당행위를 유발한 당해 사업과 관련된 계약 입찰에 참가하거나 계약을 수주 또는 체결하지 못한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찰 참가는 제5조 제2항의 각호 시점에서부터 입찰서

류 제출 시점까지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⑤ 수주자 등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 중에 있거나, 다자개발은행(MDB)으로부터 상호제재(cross debarment) 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 중에 있는 경우, 해당 부정당업자는 기금지원사업의 계약 입찰에 참가하거나, 계약을 수주 또는 체결하지 못한다. 제5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때, 입찰 참가 적격성 판단 기준일은 입찰서류 접수 마감일로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다자개발은행으로부터 상호제재 처분에 따른 기금지원사업의 계약 입찰 참가, 계약 수주 또는 체결 금지기간은 해당 상호제재 부과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한다.

제4조(제재 사유의 확인)

은행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했을 때는 붙임 각 호의 제재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붙임 각 호의 제재사유에 해당하는 부정당행위로 인해 수주자 등 또는 그 임직원이 사법기관에 의한 확정 판결 또는 행정기관에 의한 처분을 받았을 경우
2. 붙임 각 호의 제재사유에 해당하는 부정당행위로 인해 수주자 등 또는 그 임직원이 개도국의 법령에 근거하여 동국의 사법기관에 의한 확정 판결 또는 행정기관에 의한 처분을 받았을 경우
3. 수주자 등 또는 그 임직원이 붙임 각 호의 제재사유에 해당하는 부정당행위에 관여한 것을 인정하는 경우
4. 은행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붙임 각 호의 제재사유에 해당하는 부정당행위로 판단하는 경우

제5조(제재 대상 계약)

① 제3조에 의한 제재의 대상이 되는 계약은 EDCF 제재기간 중에 기금을 통해 지원하는 계약 관련 입찰절차를 진행하는 계약으로 한다. 다만, 제재로 인해 수원국에 중대한 불이익이 초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재 대상 계약을 EDCF 제재기간(제3조 제5항의 경우, 처분기간으로 본다) 중 새롭게 입찰절차가 개시되는 계약으로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입찰절차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점부터 해당 계약의 체결시까지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1. 컨설턴트 고용

가. 지명경쟁입찰(Short List) 방식

(1) 차주가 컨설턴트와 관련하여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 컨설턴트 관련

정보 제공 요청 시

- (2) 차주가 컨설턴트와 관련하여 정보제공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 : Short List
에 대한 동의 요청 시

나. 특정 컨설턴트 고용 방식

- (1) 차주가 컨설턴트와 관련하여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 컨설턴트 관련
정보 제공 요청 시
- (2) 차주가 컨설턴트와 관련하여 정보제공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 : 은행앞
사전협의 요청 시

2. 구매

가. 경쟁입찰(제한경쟁입찰 포함)에 의해 계약자를 선정하는 경우로서, 사전
적격심사를 실시할 경우 : 사전적격심사 공고시

나. 경쟁입찰에 의해 계약자를 선정하는 경우로서, 사전적격심사를 실시하
지 않을 경우 : 입찰 공고시

다. 경쟁구매 및 직접계약에 의해 계약자를 선정하는 경우 : 구매방식에 대
한 동의 요청 또는 합의시

제6조(제재기간의 특례)

- ① 불임 각 호의 제재사유 중 2개 이상의 문제를 유발한 경우 제재기간은 각
제재기간 중 장기인 것을 각각 적용한다.
- ② 불임 각 호의 제재기간 만료 후 2년 이내에 불임 각 호의 제재사유에 해당
하는 문제를 유발한 경우 적용되는 제재기간에 50%를 가산한다. 다만, 전체 제
재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 ③ 제재기간중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정상참작해야 할 특별한 사유 또는 지극
히 악의적인 사유가 새롭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불임 각 호 및 제1항 내지 제2
항에서 정한 제재기간 범위내에서 제재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공동계약에 관한 제재)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부정당행위를 직접 야기시
킨 자에 대해서만 본 제재기준을 적용한다.

제8조(제재의 발효일) 제재조치 발효일은 제재 통지 발송일로부터 5영업일이
되는 날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9조(제재의 해제) 제재기간 중에 새롭게 확인되는 사실에 의하여 제재사유
가 되었던 해당 행위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 은행은 해당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를 해제한다.

제10조(경고 등)

- ① 불임 각 호의 부정당행위로서 그 정도가 경미하여 제재에 이르지 않거나 그 밖에 은행이 공정하고 원활한 기금지원사업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주자 등 또는 계약자에 대해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다.
- ② 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경고를 받은 수주자 등 또는 계약자가 해당 경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를 반복해서 받았을 경우 불임 각 호에 정하는 기간의 범위내에서 제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부정당업자 관리)

- ① 본 기준에 의해 제재를 실시, 변경한 때에는 해당 사업의 차주국 정부, 사업실시기관 및 해당 부정당업자에게 관련사실을 통보하고 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 ② 본 기준에 의해 제재를 실시, 변경한 때에는 EDCF 제재기간중 제5조에 따른 제재대상 입찰절차가 진행중인 차주국 정부 및 사업실시기관에게 제재 사실을 통보한다.
- ③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한다. 이때 공개기간과 EDCF 제재기간은 동일하다.
 - 1. 업체(상호)명, 주소,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성명, 법인등록번호 등), 사업자등록번호
 - 2. 제재사유 및 제재기간
- ④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 등으로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의 위반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사법당국에 통지한다.

제12조(적용 제외사항)

이 기준 제3조 제5항의 경우에는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붙임)

제재사유 및 제재기간

제재사유	
(허위기재)	
1	계약과 관련되는 일련의 조달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했다고 인정될 경우
(과실에 의한 하자 또는 보수 발생)	
2	계약과 관련되는 업무를 과실로 조잡하게 했을 경우로서 하자 또는 보수가 중대하다고 인정될 경우
(하도급 관련 부정당행위)	
3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또는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미지급·지연하는 경우
(조사설계 및 타당성조사용역 부실)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설계, 타당성조사 용역을 부실하게 하여 사업진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계약위반)	
5	제2호에 제시된 경우 이외에 계약과 관련되는 업무의 이행에 임하여 계약을 위반했다고 인정될 경우
(공중 손해 사고)	
6	계약과 관련되는 업무의 실시에 임하여 안전관리의 조치가 부적절했었기 때문에 공중에 사망자 혹은 부상자를 발생시키거나 손해를 주었다고 인정될 경우
(업무 관계자 사고)	
7	계약과 관련되는 업무의 실시에 임하여 안전 관리의 조치가 부적절했었기 때문에 계약 업무 관계자 중에서 사망자 또는 부상자를 발생시켰다고 인정될 경우

(뇌물공여)	
8	기금지원사업과 관계되는 개도국 관계자, 수주자 등 소속국의 관계자 또는 기금의 임직원에 대하여 「형법」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에 위반하는 행위를 실시했을 경우
(담합)	
9	컨설턴트와 입찰자 간 설계 내용 또는 입찰 참여조건 등의 정보를 사전에 공유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등을 위해 담합한 경우
10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등을 위해 담합한 경우
11	담합을 주도한 경우
(입찰 및 계약체결 등 방해)	
12	입찰참가 및 진행을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하는 경우
(부정 또는 불성실한 행위)	
13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민원을 제기하거나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결과 등 낙찰자 선정과 관련된 민원을 입찰서류에 명시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제기하여 사업을 부당하게 지연시키는 경우
14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한 경우
15	제1호 내지 제14호에 제시된 경우 외, 계약에 관해서 부정, 불성실 또는 방해 행위를 했다고 인정될 경우

* 부정당행위를 유발한 당해 계약 및 당해 사업과 관련된 계약에 대한 제재기간은 영구로 함